

도민 지갑 채우고... 상인 매출 올리고...

이원택 “플러스 전복페이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영세상인 돕는 6대 정책 발표... 자영업자 운영 영세업소 이용할 경우 사용금액 10% '채소비 쿠폰' 으로 되돌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영세업소를 이용할 경우 사용금액의 10%를 되돌려주는 '플러스 전복페이'를 추진한다

이 의원은 2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진 골목경제를 살리고 도민의 지갑에 직접 채워지는 경제 정책이 필요한 때"라며 "플러스 전복페이"를 비롯해 도내 지역 골목상권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6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24년 기준 전북의 1인당 지역총소득(GRI)은 전국 평균의 78% 수준으로 17개 시도 중 16위를 기록했으며 최근 3년간 소득 증가율 역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며 지역 경제의 현주소를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전북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창업 5년내 절반이 폐업하는 상환이 어려운 경우 5년 생존율이 32.8%에 불과하다"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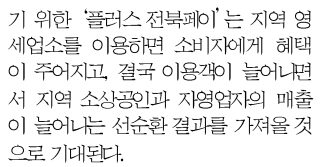
이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소비가 또 다른 지역 매출을 낳는 '플러스 전복페이'를 비롯해 프랜차이즈 육성 수수료 제도 발달업 도입, 공동물류센터 구축, 디지털 고속도로 조성, 규제 금융 지원 등 체감형 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플러스 전복페이'는 결제액의 10%를 골목상권 전용 '채소비 쿠폰'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추진돼 대형마트나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소비를 지역 내 골목상권으로 돌려 매출 증가로 직결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도민의 소비를 지역 안으로 묶어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2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러스 전복페이"를 비롯해 도내 지역 골목상권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6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 위한 '플러스 전복페이'는 지역 영세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결국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는 선순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100개 육성 사업도 추진되며 도내 30년 이상 전통과 독특한 맛을 가진 유망 식당을 발굴해 레시피 보존과 지식재산 등록을 밀착 지원해서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 의원은 물류 인프라가 없어 대량 구매를 못 하는 영세상인들의 빠른 원가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업종별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하고 대량 구매와 공동 보관 시스템을 도입해서 원재료비를 10~20% 절감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여기에 대형 플랫폼 입점 지원과 함께 '수수료 제도' 발달업 디지털 마케팅 교육 등을 통해 골목상권의 밀키트와 동네 명물이 전국 어디서나 팔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 창업부터 폐업 재창업까지 전과

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금융·세무·법률 상담을 통합 제공하고, 정책자금과 이차보전 규모를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해 '실질 금리 1% 대'를 실현하는 등 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수금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금융 제도도 도입된다. 전북도가 펀드를 조성해 미수금을 선지급하고 소송 비용 지원과 전담 변호사단 운영을 통해 법적 대응까지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책이 마련됐다 /권희성 기자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뒷받침

민주 윤준병 의원, 법안 발의... 농어업인 정책 참여 보장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어업인의 현장을 정책 결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으로,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안은 시·군 단위의 '기초농어

업회의소'와 시·도 단위의 '광역농어업회의소'로 이어지는 2단계 구조를 도입해 지방 농정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초 단위에서는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광역 단위에서는 이를 종합·조정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농어업회의소가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협력 파트너로 기능할 것이라며, 농어업인의 권익 증진과 지역 중심 농정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1만호기자 · 정음=김대환기자

“네거티브 배격, 오직 정책 선거 치를 것”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혼탁해지는 선거 국면 속에서도 네거티브 선거를 배격하고 '오직 정책 선거'를 지르겠다고 선언했다

우범기 예비후보는 25일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어떠한 네거티브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직 전주의 대변자와 시민의 안녕을 위해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해 당당하게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SNS에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회구한다"는 글을 썼다"면서 "일체의 네거티브 공세에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며 정쟁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 예비후보는 "저에 대한 가짜뉴스와 비난이 도를 넘어섰다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다"면서 "여론조사



를 앞두고 유독 심해지는 가짜뉴스, 네거티브, 마타도어 등은 시민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선거는 전주의 미래와 발전을 놓고 누가 더 나은 비전을 가졌는지 경쟁하는 축제의 장이어야 한다"며 "상대 후보를 헐뜯는 구태 정치로는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없고 전주는 그런 데 소중할 시간을 허비할만큼 한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우 예비후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면서 공약 1호로 행정통합을 시민의 편익을 위한 생활공약으로 파크골프장 조성, 시민경찰 지원 계획을 밝혔으며 26일 출마기자회견을 통해 민선9기 전주시를 이끌 정책과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민주 임실군수 예비후보 5명 “김진명 후보 경선 불복 전력... 감산 적용해야”

“무소속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여 등 당 결정에 반하는 행보”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이 당내 공천심사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특정 후보에 대한 감산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김병이·한득수·신대용 예비후보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공천심사 기준에 따른 원칙적이고 공정한 잣대가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준후·한병락 예비후보는 공동 입장에 동참했으나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 5명의 예비후보는 공동 성명을 통해 김진명 예비후보에 대해 '경선 감산(-25%)' 패널티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보들은 "김진명 후보는 과거 명백한 경선 불복 및 해당 행위를 한 전력 있다"며 당의 원칙 있는 심사를 촉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2010년 민주당 '시민공천배

심위원회' 임실군수 경선에서 탈락한 뒤, 같은 해 5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경선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5월 12일 이를 기각했다

또한 후보들은 "김 후보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에도 당 공식 후보를 지원하지 않았으며, 무소속 후보인 정인욱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당 결정에 반하는 행보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 심사 기준에서 당 결정 및 당원 위반 경력을 부적격 기준으로 포함하고 있다

특히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락하거나 공개적으로 반발한 경우 10년간 후보자 자격을 제한하고, 이후 8년간은 경선 시 25% 감산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비후보들은 "당이 정한 확고한 룰과 원칙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적용



신대용(사진 왼쪽부터)·김병이·한득수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실군수 예비후보가 2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하지 않는다면 경선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중앙당과도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기준에 따라 감산 후보에게 경선 감산 -25%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공관

위(위원장 이재운)는 김병이 김진명 성준후 신대용 한득수 한병락(가나다순) 후보자를 임실군수 후보자 경선대상자로 지난 19일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01만호기자 · 임실=진홍영기자

치안 사각지대 해소... 시민경찰 지원 확대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생활공약 2호 발표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지역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민경찰' 지원 확대에 나섰다

우 예비후보는 25일 생활공약 2호로 시민경찰의 활동 기반 강화를 위한 거점 공간 추가 조성, 보조금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시민경찰은 지역 골목 순찰과 유해업소 계도, 행사장 교통통제 등 범죄 예방 활동을 수행하며 지역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전주 완산·덕진 권역에는 약 557명의 시민경찰이 활동하고 있으나,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은 각각 6~7명 규모 한 곳에 불과해 공

간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우 예비후보는 완산과 덕진 권역에 각각 1곳씩 거점 공간을 추가로 조성하고, 시민경찰 운영 보조금도 상황에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거점 공간은 휴식과 정보 공유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조성될 계획이다

또한 민선 9기 출범 시 시민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입지를 선정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우 예비후보는 민선 8기 동안 자율방범대 초소 기능보강 사업도 지속 추진해 왔다 /01만호기자

‘피지컬 AI 특별시 전주’ 비전 선포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조지훈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피지컬AI 특별시 전주' 비전을 선포하며, 인공지능(AI) 산업 대전환을 통해 전북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25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대전환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지점은 시민의 삶"이라며, 기술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의 AI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현 시기를 전북 발전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정부 기초에 맞춰 전주시가 AI 산업을 선도하는 거점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조 예비후보는 피지컬AI 특별시 전주 실현을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새인공과 전주를 연결하는 연구·생산·실증 중심의 '피지컬AI 벨트'를 구축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의 거대한 AI 실증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구상이다

또한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AI 펀드'를 조성하고

데이터 플랫폼센터를 설립해 기술 개발과 창업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 체감형 정책으로 교육·교통·안전·돌봄 분야에 '몸을 쓰는 AI'를 도입해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AI 시민대학 설립, 재난 대응을 위한 AI 통합센터 구축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 플랫폼 도입 등이 포함된다

조 예비후보는 '피지컬AI를 통해 전주를 시민 삶을 책임지는 새로운 표준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01만호기자

김진명 예비후보 “연합 네거티브 정치공세 중단하라”

경쟁 후보들 공세 비판... “정책 중심 공정 경선하자”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임실군수 선거에 출마한 김진명 예비후보가 경쟁 후보들의 '연합 정치공세'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 중심의 공정한 경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지를 열세 후보들이 필수 연합을 통해 선두 후보를 끌어내려는 정치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책 없는 집단 네거티브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선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후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점을

지적하며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이 어려워지자 연합 전선을 형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종료된 검증 사안을 다시 문체 삼는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의도적인 여론 교란"이라며 "이는 민주당 공정경선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공천 심사 결과를 강조했다



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며 "공관위 결정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스템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병이·신대용·한득수 후보 등이 공동 행동에 나선 것에 대해 "공관위 결정을 부정하는 집단 정치행위"라고 규정했다

김 예비후보는 성명에서 연합 정치공세 즉각 중단 △공관위 결정 부정 행위 중단 △허위사실 유포 및 네거티

브 중단 △정책 중심 경선 복귀 등을 요구했다

그는 "지방선거는 정책과 공약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연합 네거티브로는 결코 민심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실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정책으로 정당당당하게 승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성명은 임실군수 선거를 앞두고 후보 간 갈등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향후 경선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01만호기자 · 임실=진홍영기자